

서평

復興の空間經濟學 - 人口減少時代の地域再生 -
(부흥의 공간경제학 - 인구감소시대의 지역재생 -)

藤田昌久・浜口伸明・龜山嘉大(후지타 마사히사·하마구치 노부아키·카메야마 요시히로), 2018, 東京: 日本經濟新聞出版社, 281쪽.

한주성*

이 책은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震災지역의 현장을 공간경제학자 3인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체험한 것을 진재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도 관련지어 일본의 경제사회시스템에서 모든 구성요소의 다양성을 촉진시키고, 또 이들 요소 간의 네트워크 상승효과로 활력이 풍부한 경제사회발전을 실현시키므로 개개 진재지역의 창조적 부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책은 7개 장과 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인구와 국토시스템의 장기적 변천)에서는 2008년 이후 인구감소의 국면에서 처음 발생한 대규모 진재지의 부흥은 보다 곤란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20세기에 들어와 일본의 인구증가는 평균소득의 증가와 의학의 발달 및 의료관계자의 노력, 건강보험의 영향으로 나타났다고 각종 인구구조 비율로 이를 설명했다. 또 메이지(明治) 유신(1868년) 이후 중앙집권국가가 형성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都(도쿄권)의 인구집중과 변화를 오사카권, 나고야(名古屋)권과 비교·설명하며, 1975~1994년 사이에 3대 도시권 중심에서 태평양 벨트 지대로 지역구조가 바뀌고 도쿄가 중추관리기능의 집적으로 一極(monopolar) 중심이 되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인구변화와 더불어 산업구성과 입지의 변화 및 1995년 이후 거품경제로 도쿄도의 인구순유입보다 근교인 사

이타마(埼玉)현과 치바(千葉)현의 인구가 더 증가했고, 가나가와(神奈川)현은 인구증가의 중간적 성격을 띠었다고 했다. 끝으로 도쿄도로의 인구전입초과는 지역간의 임금 내지 소득격차의 확대에 의하며, 대학진학자나 고학력·고임금노동자가 전국으로부터 유입되고 고령층은 인접 縣으로 이주했는데, 이는 도쿄도의 중추관리기능과 지식창조활동의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제2장(공간경제학에서 본 국토시스템의 변용과정과 부흥정책의 본연의 자세)에서는 공간경제학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핵심-주변의 공간구조를 설명하고 집적력과 분산력, 내생적 집적력의 생성 메커니즘, 또 집적의 다양성으로 규모의 경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쿄와 오사카의 지위변화는 신칸센(新幹線)의 개통에 따른 빨대(straw)효과+도시규모 효과=음영(shadow)효과로 제시하고, 나고야가 빨대효과로 작용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리고 도쿄가 일극중심이 된 이유는 전국 都道府縣의 인구증감률의 변화와 고령화율, 출생률, 소득수준에서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한 공간경제학의 관점에서 밝혔다. 또 종래의 국토정책을 살펴보고 금후의 과제로 '공통지식' 보다는 '고유지식'에 의한 다양성의 증대로 혁신력의 증진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Emeritus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shan@chungbuk.ac.kr)

인구감소시대에서 국토 만들기와 부흥정책의 기본적 시점에서는 독자적인 지역 만들기를 위한 道州制, 인재와 지식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도쿄와 지방과의 순환적 흐름과 네트워크의 형성을 확립하고, 노동력 부족을 매우기 위해 이민의 수용, 향토애를 바탕으로 한 잠재적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활성화의 대처를 제시했다.

제3장(사건과 자료로 본 동일본대지진재에서의 부흥의 걸음)에서는 진재지역의 피해에 따른 인구·가설주택 변화 및 산업의 변모를 살펴 인구유출에 의한 지역의 정착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4장(被災地에 있어서 인구감소와 창조적 부흥)에서는 피해지에서 어떠한 지역실현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해 산리쿠(三陸) 연안부¹⁾를 대상으로 광역적인 공간조직의 구조변화와 넓은 의미의 혁신에서 자연자원에 바탕을 둔 경제구조의 재구축 가능성을 논했다. 먼저 진재이전의 산리쿠 지방 인구수와 구조변화 및 경제활동 변화를 살펴보고, 지역에 인구를 유지시켜 온 고착성(lock-in)과 인구를 모이게 한 집적력은 약해지고 공간경제구조에 진재가 국지적으로 평소와 다른 분산력을 덧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대규모 진재 후에 일어난 분산력의 주안점으로 첫째, 주택의 상실과 안전성 확보의 소요시간, 둘째 중심시까지 기능회복의 지체, 셋째 고용의 불일치(mismatch), 넷째 교통인프라, 다섯째 18세 즈음 인구가 유출하는 대학공백시대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어장이나 토지 등 자연자원의 회복과 자본에 의한 노동력 대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창조적 부흥의 지방중핵도시가 소비의 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해에 강한 경제를 위해 지역산품을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해야 하고, 지역자원을 이용한 지역산품의 브랜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시점은 비록 진재지역뿐만 아니라 과소지역에도 해당된다고 하겠다.

제5장(자연자원에 의거한 부흥)에서는 진재 전 일본 어업생산액의 8.3%를 차지한 산리쿠 연안지역이 그 후 2011년에 5.0%, 2015년에 7.5%로 부흥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풍부한 자연자원이라고 하고, 이 지역을 둘러싼

어업 수급문제, 종사자 부족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또 계센누미(氣仙沼) 어항의 빠른 복구와 유럽과 미국수출을 위한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대응과 이에 따른 수산가공업 등의 분포도 밝혔다. 그리고 거점적 수산 클러스터의 성립은 지역적 수준의 정책과제로 집적과 분산의 메카니즘을 고려해 지역 내, 지역 간 생산활동의 분포와 공간관계로 고찰했다. 그리고 어업에서의 집약화 문제가 인구감소 국면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제휴 및 수요확대로 국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6장(공급사슬의 강인화)에서는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공급사슬(supply chain)의 의미와 그 이유 및 입지를 설명하고, 진재시에 현재화된 공급사슬의 문제점을 효율성 추구하고 지리적 확대, 취약성의 요인으로 지적하며 고착성의 효과를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생산설비에 영향을 미친 피해상황을 밝히며 동일본대지진의 피해 후 공급사슬문제는 도호쿠(東北)지방 제조업의 판매지역으로, 또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서 피해지 기업이 전국 및 해외 기업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리고 기업의 사업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²⁾의 진화에서 공급사슬 내부에서 정보를 공개해 공유하는 것은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구마모토(熊本)지진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러한 사업지속계획은 지방의 중소기업에도 책정되어야 하며, 사후에 복수의 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보상으로서의 보조금이 금융뿐만 아니라 부차적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7장(지역공동체의 재생)에서는 인구감소로 작아진 규모의 경제에 바탕을 둔 시장 메카니즘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피해지의 내부환경에서 다양하게 관련된 지역공동체(community)³⁾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피해지의 마을 만들기과 지역요구의 형태로 지역공동체가 유효하게 활용할 토지제도를 만들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중심시까지 재생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중심시까지와 주택지의 분리로 불편해진 교통약자에게 공유자동차 활용의 필요성과 도시간의 간선급행버스(Bus Rapid Transit) 도입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리고

시·읍·면 합병으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집약화를 위해서 지역공공교통 만들기에 지역공동체의 참가가 선진적 사례라고 했다.

지역공동체와 지역혁신에서는 지역이나 조직의 역사와 전통, 문화 등을 토대로 구축된 사람들의 상호관계를 새로운 가치관으로 혁신을 일으킨다며 지역자원의 개발을 이용한 사례지역들을 소개하고, 지방도시의 중심시가지가 지역혁신의 거점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쓰나미(津波)가 관광업에 미친 영향과 지역방재훈련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진재로 인한 도시간 제휴의 효과와 지방도시에서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질 높은 농수산물이나 전통공예품 나아가 뛰어난 숙련 기술자가 정교하게 만든 상품이 판매됨에 따른 공급사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보론(인구감소사회를 위한 공간경제학 이론)에서는 미시경제학에서 공간경제학의 이론적 요소로 다양성과 차별화, 규모의 경제 및 수송비를 설명하고 이들 세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내생적 집적력과 분산력이 나타나 공간구조가 상호의존적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증가에 따른 새로운 도시의 생성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인구감소가 도시의 소멸을 가져 올 것이라는 가능성을 분석했다. 이러한 점은 규모의 경제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단일유형 산업을 가정한 것으로, 복수의 산업유형을 도입함으로써 계층적 도시시스템의 자기조직화의 메커니즘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입지 공간을 파괴하는 여러 요인 중 교통허브, 자연자원이 도시의 집적에 미치는 고착성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인간의 다양성을 배경으로 한 지역 내외의 계층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혁신이 활성화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위의 분석결과를 부흥정책에 대한 합의로 정리했다.

이 책은 공간경제학의 視點에서 동일본대지진의 피해 지역(산리쿠 연안지역)이나 지방도시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가 지역 만들기라는 지역재생의 바람직한 모습을 논의했는데, 지역의 자연자원을 하나의 집적력으로 이용해 그 방안을 제시한 것은 지금까지 일본의 지역재활성화·지역재생의 방안으로 제시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일지라도 활동인구나 관계인구를 계속 활용하

는 것도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지적한 것은 새로운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 중 제7장 제6절의 지역공동체와 지역혁신의 관계에서 시마네(島根)현 아마(海士)읍과 도쿠시마(徳島)현 가미카츠(上勝)읍의 사례는 제7장 제2절과 제2장 제5절에서 각각 다른 내용과 중복되고, 제3항의 지방대도시의 과제는 지역공동체 혁신 다음에 전개시키는 것이 더 체계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책의 말미에 있는 보론의 제1절 공간경제학 이론의 기본적인 생각은 제2장 제2절의 공간경제학의 기본적인 생각 다음에 진술함으로써 연속성을 유지시키고 더 체계적이며, 또 제6·7절은 결론부문에 해당됨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도 인구감소기에 들어가고 지구적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즈음 이에 대한 부흥을 위한 방안·검토로 일독을 권하고 싶다.

주

- 1) 미야기(宮城)현, 이와테(岩手)현, 아오모리(靑森)현의 리쿠젠(陸前)·리쿠추(陸中)·미치노쿠(陸奥)지방의 연안부를 말하는데, 이들 앞 바다는 조경수경을 이루어 일본에서의 해면어업과 양식어업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2) 재난 발생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을 말한다.
- 3) 소비자, 생산자, 정부와 더불어 여러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이 경제주체로서 서로 협동해 시장메커니즘을 보완해서 개별이윤(효용) 최대화보다 지역전체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주민주체의 시스템을 말한다.

교신: 韓柱成, 05507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신천동, 파크리오), 전화: 02-416-0316, 이메일: jshan@chungbuk.ac.kr

Correspondence: Ju-Seong Han, Parkrio, Shincheon-dong, 435 Olympic-ro, Songpa-gu, Seoul city, 05507 Korea, TEL: +82-2-416-0316, E-mail: jshan@chungbuk.ac.kr

최초투고일 2020년 12월 04일
수정일 2020년 12월 09일
최종접수일 2020년 12월 11일